

▣ 인구감소 심화로 갈림길에 선 일본 경제

□ 소자화(小子化, 저출생률) 및 고령화(高齢化) 현상 일본 경제에 충격

- 일본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본 국립사회보장,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일본의 합계출생률 (Total Fertility Rate,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)은 역대 최저 수준인 1.29명을 기록했다.
- 일본의 인구는 2006년 1억 2774 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.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1천만 가량의 인구가 줄어들고 2050년에는 1억 59 만명으로 감소, 1960년대 후반의 인구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일본의 출생률 저하 현상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.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여성 인구가 줄곧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에 따른 ‘기회비용의 손실’이 크기 때문임.
- 기혼 직장 여성이 출산에 따른 퇴직 후 정사원으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속한 남성에게 비해 임금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이 일용 계약직[일명 : 바이토, バイト(Arbeit의 일본식 조어)]에 종사함. 정년 연령까지의 임금 손실 비용은 평균 약 1억 8500만엔 (원화 약 19억원)에 달함.

□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심화로 일 정재계 외국인노동자 수용 본격 검토

- 일본 인구의 고령화, 특히 경제 활동의 주역인 생산연령인구(15세 - 64세)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. 일본의 총인구에 앞서 생산연령 인구는 이미 지난 1995년에 8,726 만명을 고비로 감소, 2020년에는 무려 1300 만명이 줄어든 7445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.
-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에 영향을 받아 소비 시장에 불안감이 유발, 단기적으로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영유아 및 10 - 2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임. 또한 일본의 에너지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,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.
- 장기적으로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는 일본 경제의 버팀목인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. 현재의 일본 노동력의 수요가 향후 30년 동안 유지된다면 약 2400 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해야만 한다는 추산도 있음. 이에 최근 일본 정부와 재계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발히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리스크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는 실정임.

□ 생산성 향상만으로 일본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나?

- 결국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.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양분됨.

- 낙관론자들은 ‘일본의 노동력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.’라고 말하고 있음.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높지만 자발적 실업자[일명 : 프리타, 일본의 20-30대가 특정 직장에 얽매이는 대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것(フリタ : Free Arbeit의 일본식 조어)]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가용 노동력에 여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’고 지적하고 있음.
- 비관론자들은 ‘기술력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에 상당 부분 기여하더라도 결국 노동력의 감소를 보완할 수 없다. 즉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고 이르면 5년 후 2009년에 다시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’고 일침을 가하고 있음.
- 1950년대 중반 이후 저비용의 생산연령인구가 급증하는 이른바‘인구보너스’는 일본 경제가 눈부신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. 하지만 21세기 경제대국 일본은 인구 마이너스 보너스’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(문의처 : 나고야무역관 이승수 okbody@kotra.or.kr)